

제주4·3 제73주년 특집 <하> 제주4·3특별법 개정 성과와 과제

“4·3 완전한 해결 제도적 기반 마련”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 공동 기획 토론회
다른 과거사 배보상 여건 마련 등 추가 성과도
“정명·진상규명 등 다룰 ‘추가진상조사단’ 필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도약의 길이 열렸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21년 만에 전부개정되면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및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과제도 남아있다. 수십년째 논의되고 있는 4·3 정명(正名),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 등 명확한 진상 규명, 위자료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담은 보완 입법 등은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다.

한라일보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김동만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지난달 27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7면

우선 4·3특별법 개정으로 아직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다른 과거사, 특히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에 대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데 기대가 모아졌다. 또 군사재

판 관련 직권재심 및 일반재판 관련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법제화됐다는 점이 성과로 꼽혔다.

양조훈 이사장은 “본 보고서와 추가 진상보고서까지 나온 한국의 과거사는 제주 4·3이 유일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위원회, 의회 차

원 4·3 추가 진상조사가 다시 시작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용역 조사가 제주 4·3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전체에 대한 배보상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거사 관련 유족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진상조사를 발의 ‘(가칭)4·3 추가진상조사단’ 설립 의견도 제시됐다. 사건, 사태, 폭동, 항쟁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4·3 정명 문제와

미군정의 역할·책임규명 등 후속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양조훈 이사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진상조사단 성격의 조직을 준비하겠다”며 “미군정 책임 규명 관련, 석달 안으로 추가 서적 세권을 더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추가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통해 해당 보고서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고서라는 위상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미군정의 책임과 관련해서 외교 차원의 협력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대해기자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 분주 오는 3일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치러지는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행사를 알리는 아치가 세워지는 등 준비가 한창이다.

아동학대 예방·보호 종합계획 확정

도, 아동복지심의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사후 관리를 포함한 ‘2021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도, 경찰청, 도교육청, 법률·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전 발견을 위한 전·도민 대상 인식 개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통합적 대응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피해아동 치료와 사례관리 고도화 등 4개 분야에 대해 총 18개의 과제로 나눠 실행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강대해기자

제주도의원 2공항 부동산 투기 조사 의원 43명 전원 동의… “관련 의혹 철저 해소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더해 도의원을 상대로 한 전수 조사도 함께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31일 “도의원 43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2공항 예정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전수 조사를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도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요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허법률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의혹 스스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라며 “전수조사와 함께 의원 부동산 신고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5일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성산을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도내 공직자들에게 솔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정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반영… 7월 중 국회 제출

정부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재정립했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을 강화하며,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5월 8일 까지 의견을 청취,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7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 그간 6차례 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이양 및 특례 등을 추진했으나, 이양된 권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 및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충,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청정제주 환경관리강화 등 향후 제주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재정립했다.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정의 규정해 추가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을 강화했다.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감염병 예방 및 재난사태 발생 등 필요 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및 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한편 개정안은 제주도가 2020년 7월 제출한 제도개선 56개 과제 중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가 수용한 39건이 모두 담겼다.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17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윤-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제394회 임시회

2021. 4. 20.[화] ~ 4. 30.[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처리

[연간의회운영일정]					
월	회기	기간	월	회기	기간
2월	제392회 임시회	2. 22.(월) ~ 3. 4.(목)	7월	제397회 임시회	7. 14.(수) ~ 7. 21.(수)
3월	제393회 임시회	3. 17.(수) ~ 3. 25.(목)	9월	제398회 임시회	9. 7.(화) ~ 9. 14.(화)
4월	제394회 임시회	4. 20.(화) ~ 4. 30.(금)	10월	제399회 임시회	10. 12.(화) ~ 11. 3.(수)
5월	제395회 임시회	5. 20.(목) ~ 6. 1.(화)	11월	제400회 임시회	11. 15.(월) ~ 12월 제2차 정례회 ~ 12. 15.(수)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 15.(화) ~ 6. 30.(수)	12월	제401회 임시회	12. 17.(금) ~ 12. 23.(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